

2017 국가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17.4.8 시행)

0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제포인트> 대표관료제의 등장배경 [답] ①

① 업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은 실적주의이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이고 경직적이며 비인간적인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0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효율성 강조
-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 ㄹ. 고객중심의 행정
- ㅁ. 기업식 정부 운영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출제포인트>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 [답] ③

③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국 사회의 격동기에 빈곤, 차별, 소외, 폭동 등 절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신행정학은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지향하며 가치주의와 정책지향주의를 제창하였다.

<오답체크>

- ㄱ.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중시한다.
- ㄴ. 실증주의적 연구가 아닌 탈실증주의적 연구를 지향한다.
- ㅁ. 기업식 정부 운영은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된 시장지향적 정부운영이다.

0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

난다.

-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출제포인트> 관료제 병리현상 [답] ④

- ④ 막스 베버(M. Weber)의 관료제는 법규와 절차의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감정 및 편견 없이 공평무사한 행정을 추구하여 비정의성(impersonalism)을 특징으로 한다.

0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 ②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출제포인트> 계급제의 장점 [답] ③

-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계급제는 폐쇄형, 직업공무원제, 일반행정가주의(generalism)와 관련된다.

<확인체크>

- ① 계급제는 폐쇄형이므로 공무원의 신분 안정과 직업공무원제에 기여한다.
- ② 계급제는 인사행정의 탄력성을 강조하므로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 ④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조직 중심의 분류제도이므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장이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출제포인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 [답] ③

- ③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확인체크>

- ① 김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② 관세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이 되고,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0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출제포인트>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 [답] ③

③ 상향식 정책집행은 정책집행현장의 상황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오답체크>

- ①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대표적인 통합 모형이다. 사바티어는 처음에 하향식을 주장하다가 통합형인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주장하였다.
-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하향식 집행의 특징이다.
-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향식 집행의 특징이다.

0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출제포인트>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 [답] ①

①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불만을 주는 요인인 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인 동기요인이 서로 독립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지 두 요인 간의 계층화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확인체크>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면 불만이 사라지는 것이지 동기요인과 관련된 근무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0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출제포인트> 정부조직 [답] ④

④ 특허청은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책임운영기관과 소속기관 형태인 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특허청은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자 책임운영기관이다.

<오답체크>

-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이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이다.

0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출제포인트> 공익(Public interest)의 실체설과 과정설 [답] ③

③ 실체설은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공익(국가의 이익)이라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사익)이 희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오답체크>

- ① 공익을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것은 과정설의 특징이다.
- ②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는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 ④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실체설의 특징이다.

10. 전략적 인적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출제포인트> 전략적 인적관리 [답] ②

②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구성원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며 개인의 욕구와 조직목표 간의 조화, 일과 삶의 조화(QWL) 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인사관리를 의미한다.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출제포인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 [답] ②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①, ③, ④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

<정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1. 병역관경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관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관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 하려고 한다.
-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출제포인트>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답] ④

④ 무의사결정이란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의 이익에 도전하는 의제나 요구를 정책문제화 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것으로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현상이다.

<오답체크>

- ①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이슈는 의제화하지 않는다.
-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이 아니며 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이다.
- ③ 무의사결정은 협의로는 주로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나지만 광의로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 ④ 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출제포인트> 정책결정모형 [답] ②

② 최적모형은 Y. Dror가 주장한 모형으로 합리성과 초합리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즉 정책결정자의 직관적인 판단이나 통찰력 등의 초합리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다.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간 퇴직 전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
- ① 3년 5년
- ② 5년 3년
- ③ 2년 3년
- ④ 2년 5년

<출제포인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답] ①

①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의무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정리> 공직자 취업제한 의무

대상자	퇴직 전	퇴직 후	대상기관	근거법률
등록의무자	5년 이내	3년간	사기업체	공직자윤리법
비위면직자	5년 이내	5년간	공사기업체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법
--	--	--	--	-------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슈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출제포인트> 주요 예산제도의 특징 [답] ②

②는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계획예산제도(PPBS)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단기적인 예산제도이다.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출제포인트>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답] ①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다.

<정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출제포인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 [답] ③

③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정리> 지방자치법 3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정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도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제포인트>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 [답] ①

① 정부실패 요인 중 x-비효율성이란 정부조직의 관리상의 비효율성으로 정부업무가 경쟁상태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도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확인체크>

- ② 지대추구이론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규제에 따른 독점적 이윤(지대)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
-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 등 사전·사후적 비용을 모두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 ④ 대리인이론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며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출제포인트>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 [답] ④

④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오답체크>

- ① 한국방송공사(KBS)는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에 해당하지만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EBS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 ②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 ③ 한국연구재단은 기금관리형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정리> 2017 공공기관 지정내역 (기획재정부 고시, 2017. 2. 2)

2016년 323개 지정 → 2017년 334개 지정

공기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공항공사(인천국제, 김포한국), 부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주) 등 5개 발전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총 14개)
	준시장형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항만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공무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위탁집행형	한국소비자원,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등
기타 공공기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출제포인트>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 [답] ①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을 사전에(예산집행전에) 통제하는 제도이다.

<정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체크>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